

1995년도 춘계심포지움

일시 : 1995년 5월 13일 토요일

장소 : KOEX 국제회의실 (4층)

주최 : 사단법인 한국영양학회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진흥재단

보건복지부

국가 영양 정책과 국민 복지

이 상 회

국가 과학기술 자문 회의

오늘 여러 교수님, 전문가, 선배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한다는 것이 외람된 듯하나, 때로는 새로운 발상법을 위해 권 외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사실 "영양 정책"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국에도 '영양 정책'이 있느냐고 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11대 및 1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 특히 유전 공학 육성법, 해양개발 기본법, 대체 에너지 법, 항공 우주 산업·육성법등 여러 의원입법을 하면서도 단 한 가지 못한 것이 '국민 식품 영양 관리 기본법'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정치의 본질이 바로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들을 그때 모시고 조언을 받아, 이 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므로, 이는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기 때문인지 이것은 '잊혀진 계절'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접근 방법은, 단순히 영양이라는 문제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UR과 관련되어 농업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 및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구촌 하나의 국가 생활권으로 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영양 문제는 국민의 체질을 염두에 두고 끌어 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유전적 소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3%, 영양이 32%, 운동이 29%정도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불리한 소인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백혈병의 유전인자를 가진 경우라도 영양 문제와 운동의 61%를 후천적으로 관리하므로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반 이상을 조절하게 되므로 유전인자에 의한 효과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됩니다. 따라서 후천적인 관리가 가능한 영양과 운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영양이라는 측면을 먼저 검토해 볼 때, 영양을 과연 식탁에서만 생각해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촌이나 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산물부터 식품 산업 및 식품 가공 산업에까지 연결시켜가며 영양을 고려해야만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이 확보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질병을 그 유전적 소인과 사회적 요인, 건강적 요인들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육체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정신적 질병으로 진행되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신적 불균형에서부터 육체 질병으로 진전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시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성인병, 만성 퇴행성 질환, 정신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영양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 보감을 보면 상약, 중약, 하약이 있습니다. 상약은 부작용이 없고 중약은 약작용과 부작용이 엇비슷하며, 하약은 부작용이 훨씬 우세한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약과 하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FDA에서 하듯이 안전성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연구 시험 결과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상약'이란 바로 식품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 부작용이 없는 상약'인 '식품을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는가'가 바로 우리 영양학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상약이라는 식품을 뒷받침하는 영양으로써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양 목표 및 지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에로의 접근을 위한 지침을 정립하여 우리의 식품 생산을 위한 농·수·축산업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부의 사회 참

여 증가에 따라 부역을 대체하게 된 식품 산업은 단순히 산업이 아닌, 주부가 가족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듯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부역으로서의 식품 산업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영양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지침을 정해 이 지침을 뒷받침하는 농·수·축산업 정책과 식품 산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양과 식량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 중 그 어느 하나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식품 영양 관리 정책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부서, 즉 농림수산부에서는 식량을 담당하고, 보건사회부(당시)에서는 영양을 담당했던 관계로, 이 두 부처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맞추어 돌지를 못하고 서로 주무부서가 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조말 사색 당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 부처들 간의 이러한 갈등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 마치 나라를 잃는 것처럼 국민의 건강을 잃는 우를 범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 영양학회가 영양 학회이기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정보화 시대의 multimedia적인 종합 기능의 일부로써 영양 학회가 식량 정책과도 연계를 짓고 식품 산업과도 연계를 지어 일종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최종목표인 국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건강에 대해 29%의 요인 효과를 지닌 운동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를 위해 국제 기구인 사회 체육 센터 내에 운동 처방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의 운동이 아니라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운동 처방 연구소의 핵심을 이루는 분들이 바로 대학병원의 의사와 영양사들입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이를 위한 영양 지침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영양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디젤엔진에는 디젤이라는 영양이 필요하고 비행기 엔진에는 고급 휘발유를 써야 하듯이 운동도 영양과 연합 전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운동 처방의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영양 학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운동, 식품 산업, 농·수·축산업 정책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영양학이 거들어야 합니다. 즉, 건강에 관련된 요인중 추천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비슷한 것이 바로 영양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들의 역할은 이 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슈바이처의 역할 이상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현행 법규나 담당 기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여러 명이 열심히 일해 한 사람을 support하던 농업 사회와는 달리, 뛰어난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을 이끌고 지원하는 시대이므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영양은 태교의 영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아기, 국민학교를 거치며 창의적인 두뇌의 개발을 위해 영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양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할 때 상식에 급급하여 막연히 과잉이나 결핍이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의 세분화, 다양화 등의 특성에 맞추어 복합 기능의 일부로써의 영양의 역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성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보건 복지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있어서 국민 영양 조사 및 영양 지도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법이 있어 학교 급식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국 multimedia적인 정보화사회에서는 '법'이라는 부분도 다른 부분과의 연계가 필수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과 우리의 법을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자율과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법이 육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법이 미국에는 존재합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존재로서 구성된 사회법은, 과거지향적인 사례나 판례 등에 따른 정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자원 육성을 그 근간으로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Law school처럼 학부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후 Law school로 진출해

국가 영양 정책과 국민 복지

입법 시에 영양학과 관련된 기술적인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학회에서도 사법 개혁이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영양학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학부에서 기술 전공자가 Law school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자연 과학도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전공관련 분야에만 연연하고 이외의 관련 타분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단순히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문제로도 연결될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련된 종래의 '불특허사유'가 거의 없어졌으므로 영양 처방이나 음식산업등도 특허로 연결되어 독점적 아이디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지적 재산권 문제가 거론되고 이중 영양 처방에 관한 법적 소송은 영양학을 전공하고 Law school을 거쳐 변호사가 된 사람만이 변호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양 학회도 보다 크게 눈을 뜨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일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전문 행정을 강조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사회는 비전문사회입니다. 한 예로 철근 용접을 위한 용접 연구소나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 기술 연구소 같은 곳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수 대교 참사나 대구 참사를 계기로 하여 어느 개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용접 연구소나 방식 기술 연구소,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 연구소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 전문 행정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희 국가과학기술 자문 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기술 인력은 3급이상 인원중 9%에 불과하며, 일반 기업은 임원이 53%, 국회는 299명의 국회의원중 단 9명이고 사법부엔 단 1명도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도록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국가적 조직은 비 기술 전문적으로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 보고에 즈음하여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영양이나 식품에 관련된 법이 국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 구성은 이런 법을 입안할 생각도,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므로 바로 우리 국회의 정치 개혁 또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영양학회의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어떻게 체계적인 시스템 법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행정조직중 농림수산부나 보건복지부, 내무부, 재정 경제원등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영양이란 기본 요소를 어떻게 multimedia적으로 통합화시켜 종합 정책으로 이끌어 주는 가를 결정할 행정기관의 존재와 역할이 또한 중요합니다. 셋째로 행정과 법령을 뒷받침 하기위한 전문적인 software 즉 know-how의 공급을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연구소의 관련 연구 인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급성장하는 전자 게임 회사들을 예로 들면, 이 회사들의 연구 인력은 전 종업원 수의 30%에 달합니다. 그만한 연구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급성장이 가능했듯이, 우리에게도 연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지난 대구참사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많은 재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virtual reality(가상 현실)에 입각한 대비책의 차원에서 연구력의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성수 대교 참사나 대구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수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로 전 국민이 불안해졌고 전 언론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병원성 미생물과의 전쟁은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virus와의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간염 virus와의 전쟁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간염 virus와의 전쟁에서 비롯되는 전사자(간염, 간암, 간경변 등)의 수는 매년 23,000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십명대지 백여 명의 죽음에는 연연해하면서도 다른 편에서의 23,000명의 소리없는 죽음은 또 하나의 '잊혀진 계절'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염 이 부분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부분일까요? 간염 virus 보유율을 보면 우리가 8.6%, 일본이 2.6%로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십수년간의 정부의 노력으로 보유율이 10%이상으로부터 8.6%까지 감소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국민의 건강 관리를 잘한다면 이 전쟁에서의 전사자 중에서 20,000명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염 virus보유자가 될 요인이라면 간이 피

이 상 회

로한 경우가 될 것이고, 이 간이 피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식품, 영양 지침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에 따라 간의 피로가 방지된다면 우리의 간염 virus 보유율을 2~3%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것은 충분한 연구 인력의 확보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영양학회의 할 일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듯이, 여기 이 자리의 많은 태양들께서 이러한 국가의 갈길, 국민 삶의 질이라는 건 강을 뒷받침하는 영양의 복음을 많이, 널리 전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